

#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인 쇄 2007년 6월 29일  
발 행 2007년 6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품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7-01)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02-3 93340 : 비매품

340.9-KDC4  
327.1747-DDC21

CIP2007002003

#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	1
II.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	5
1. ‘2·13 합의’의 배경 .....	9
2. 향후 북핵문제 전개방향 전망 .....	12
III. CTR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	17
1. 법적 근거 .....	18
2. CTR 프로그램의 이행과 성과 .....	23
IV. 9·11 사태와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37
1. 9·11 사태의 영향 .....	38
2.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40
V.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 .....	43
1. 우크라이나 .....	44
2. 리비아 .....	51

VI. 대북 안전보장과 대남 핵우산 .....	61
1. 적극적 안전보장 .....	63
2. 소극적 안전보장 .....	64
3. 미국의 대남 핵우산 .....	67
VII. 결론 .....	71
1. 북핵위기의 전략적 함의 .....	72
2. 바람직한 북핵폐기 절차 .....	77
참고문헌 .....	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87



## 목차

<표 II-1>	‘2·13 합의’ 항목별 정리 .....	6
<표 III-1>	국방부의 CTR 예산: 요청과 승인 .....	25
<표 III-2>	핵무기와 하부구조의 폐기 현황 .....	26
<표 V-1>	우크라이나, 리비아, 북한의 핵포기 상황 비교 .....	57
<그림 III-1>	미 행정부의 CTR 프로그램 지출예산 (1992~2004) .....	32



서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지배하던 북한 핵문제는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으로 그 실체가 입증됨으로써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6자회담의 제5차 3단계 회담이 2007년 2월 8일~13일에 개최되어 북핵폐기의 초기조치에 해당하는 소위 ‘2·13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2003년 4월 미·중·북 3자회담을 모태로 시작된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제1차 6자회담이 200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이래 2007년 2월 제5차 3단계 회담까지 열렸고, 2005년 9월에는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폐기 의무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안보·외교·경제적 반대급부를 명시한 포괄적인 문서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정표이자 총론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이 3년이 넘게 진행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원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핵 폐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우리의 북핵 폐기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본다.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구체적인 폐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9·19 공동성명의 채택을 기점으로 해서, 북핵문제는 총론 차원에서 각론 차원의 논의로 국면이 전환되었다고 인식한다. 제5차 3단계 회담에서 영변의 원자력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불능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 폐기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핵폐기 과정에서 일체의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핵개발 참여자들의 전폭적인 협력 속에서 신속하게 폐기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호 협력적으로 핵위협을 제거한다”(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는 개념과 그 실천적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CTR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교훈을 북핵 폐기 과정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핵을 평화적으로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논거를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핵 폐기를 통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
- 남과 북의 협력을 토대로 핵심적인 군사 위협을 제거한다.
-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장려하고 핵 폐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나간다.
- 그간 핵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종사해 온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생존과 활로를 보장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에 기여하고 ‘인간중심적인’(Human-Oriented) 핵 폐기를 달성한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13 합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북핵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둘째, 미

I
II
III
IV
V
VI
VII

국에서 1991년 11월 27일 발의된 『소련의 핵위협 제거 법안』을 토대로
 진행되어 온 CTR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과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분석
 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었지만, CTR 프로그램이 그간에 거둔 성과도 대단히 크다. 미국
 내에서는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CTR 프로그램이
 이러한 비판을 견디어내며 지금까지 지속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CTR 프로그램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셋째, 9·11 사태가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 유지에 준 영향과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G8 Global
 Partnership Program)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를 현재의 북한 상황과 비교해서 분석하고자 한
 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 폐기에 관련된 기술적, 절차적 사항들은 앞
 서 소개하는 CTR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제
 공한 안전보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또한 리비아의 경우에는
 신속한 핵 폐기 절차와 이 사례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안전보장과 핵우산과의 관계를 밝히고, 핵 폐기의 대가
 로 제공되는 대북 안전보장이 미국의 대남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도 없
 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조성된 위기의 전략적 함의를 억지전략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북한 비핵화’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계적인 북핵폐
 기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으로 가파르게 상향곡선을 그리던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일단 주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13 합의’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1</sup>

<표 II-1> ‘2·13 합의’ 항목별 정리

		항 목	내 용
제항	최종 목표		○ 한반도 비핵화 조기 달성
	이행 원칙		○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 실시
제 II 항	초기 단계	북측 이행 조치	○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 IAEA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협의 개시
		북·미, 북·일 대화 개시	○ 북·미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 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과정 개시 ○ 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대화 개시
		대북 보상 조치	○ 9·19 공동성명 1조와 3조에 의거 참가국들은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 ○ 초기단계에서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 2·13 합의 이행을 전제로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
		이행 시한	○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

<sup>1</sup>- <표 II-1>은 다음 논문에서 제시된 표를 보완한 것이다. 조성렬,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평화통일포럼 제7차 세미나 자료집, 2007. 5. 3), p. 33.

		항 목	내 용
제Ⅲ항	실무 그룹	설치	○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5개 실무그룹을 설치 -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임무	○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계획을 협의·수립 ○ 실무그룹의 진행상황을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 ○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
		개최 시한	○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
제Ⅳ항	중간 단계	북측 이행 조치	○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실시
		대북 보상 조치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Ⅴ항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 초기조치 이행을 완료한 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히 개최	
제Ⅵ항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착수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	
제Ⅶ항	후속 회담일정	○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한 뒤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 - 일본도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	

I  
II  
III  
IV  
V  
VI  
VII

이상의 <표 II-1>의 내용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단계 조치: 3월 13일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5개 실무그룹의 가동을 개시함: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 관계정상화, ③북·일 관계정상화, ④경제·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안보체제. 4월 13일 이전까지 북한은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영변 소재 핵시설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관의 감시·검증 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하며, 핵포기 대상으로서 신고해야 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협의를 개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5만 톤을 제공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및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를 개시함.
- 다음 단계 조치: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완료하고,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실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실시함.

본 절에서는 ‘2·13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합의의 도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2006년 말 제5차 2단계 회의 때만 해도 타결 가능성이 미지수였던 6자회담이 연초의 북·미 베를린 회담을 토대로 성과를 낸 원인을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정책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번 ‘2·13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향후 전개방향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 1. ‘2·13 합의’의 배경

2·13 합의를 이끌어 낸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부시 행정부의 전술적 변화이고, 둘째는 금융제재와 유엔의 제재결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일시적인 후퇴이다.

### 가. 미국

부시 행정부 앞에는 이라크, 이란, 북한이라는 세 개의 전선이 구축되어 있고,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미군 희생자가 속출함으로써 고전을 겪고 있다. 작년 가을 의회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완패했고, 총애하던 럼스펠드를 해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중동의 이란 역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임기 말의 레임덕 대통령으로서 세 개의 전선을 상대한다는 일이 힘에 겨웠을 것이다. 북한과 이란이 미국을 교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미 판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이라크 사태와 아직 물이 엮질러 지지 않은 핵개발 초기 단계인 이란 핵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에서는 타협책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핵문제는 나가사키급 핵무기 10여 개를 보유하고 한 차례의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능력 확대를 방지하고, 핵물질과 핵기술의 유출 그리고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을 차단하고 핵 폐기의 초석을 놓음

I

II

III

IV

V

VI

VII

으로써 그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핵 정책을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남는 여력을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의 근거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부시 대통령 재임 중에 이란을 공격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에 기초해서 분석한 바 있다.<sup>2</sup>

첫째, 미국은 이란 정권의 핵개발 의지가 강하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야 한다는 등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부에서는 그를 인종말살도 자행할 수 있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로 간주한다. 셋째,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이라크에서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이란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미군 증파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란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략도 공개했는데, 그 중 하나는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걸프지역에 파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라크에서 발견되는 이란 공작원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그의 핵심 외교정책, 즉 중동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보유를 저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시는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sup>2</sup>- "Next stop Iran?" *The Economist*, February 10, 2007, p. 11.

물론 ‘2·13 합의’에서 나타난 북핵 정책의 변화가 북한 정권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인 혐오감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정권에 대한 ‘맞춤형 봉쇄’라는 기본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보수진영 쪽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국가와의 협상에서 굴복했으며,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 요소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했다.<sup>3</sup>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정도의 합의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몇 년 전에 가능했으며, 그랬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이와 달리,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팀에게 협상을 타결하도록 새로운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 2·13 합의의 타결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융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sup>5</sup>

## 나. 북한

북한 역시 당면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기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융제재와 핵실험 이후의 대북지원 중단으

3- 볼튼(John Bolton) 전 유엔대사는 CNN과의 회견에서 ‘2·13 합의’가 제네바 합의의 재판에 불과하며 부시 대통령이 지난 6년간 견지해 온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했다. CNN, February 12, 2007, <<http://transcripts.cnn.com/TRANSCRIPTS/070212/sitroom.02.html>>.

4- David Sanger, “Outside pressures snapped Korean deadlock,” *New York Times*, February 14, 2007; Helene Cooper and Jim Yardley, “Pact with North Korea draws fire from a wide range of critics in U.S.,” *New York Times*, February 14, 2007.

5- Glenn Kessler and Edward Cody, “U.S. flexibility credited in nuclear deal with N. Korea,” *Washington Post*, February 14, 2007, p. A11.

로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핵실험이 촉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금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쌀과 비료 그리고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노렸을 것이다. 먼저 금융 제재 해제와 더불어 유엔결의안 1718호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제재의 올라가미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제재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초기조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하나의 노림수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끌어내려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남한 대선구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일환으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해왔고, 작년 10월 핵실험 이후 남한의 대북한 여론이 상당히 보수화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초기조치 합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북한 핵문제가 대선의 쟁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을 것이다.

## 2. 향후 북핵문제 전개방향 전망

2·13 합의가 가능했던 데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핵심 열쇠였다. 2006년 12월 하순까지만 해도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6자회담이 불과 두 달도 안돼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금년 1월 베를린 회동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북·미 베를린 회동을 전격 제의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바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부시 행정부였다.

이제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의 핵 위기를 초래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정보판단이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솔한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정도다. 미국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목격하면서 많은 이들이 부시 행정부의 북핵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북핵문제의 전개 방향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 가. 시나리오 1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의지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즉 ‘2·13 합의’가 철저하게 이행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가 기술적으로 불가역적인 단계에 오면 북·미 수교를 하고 이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까지 체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 나. 시나리오 2

미국이 김정일 정권 내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 대사관을 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중국의 독주를 막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미국 관리의 평양 상주

I
II
III
IV
V
VI
VII

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면 핵무기와 핵기술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해외유출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에 대한 관리를 핵무기 폐기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다.

### 다. 시나리오 3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목적은 2007년 한국 대선에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피하고, 2008년도 미국 대선에서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더 나아가, 외교적인 노력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무력사용의 명분을 축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도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라. 시나리오 4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놔두고, 핵무기의 추가생산과 해외유출을 막는 데 만족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부시 행정부는 핵확산을 저지했다는 것을 외교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지만 한국은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커다란 짐을 떠안게 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것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현 시점에서 예단하긴 어렵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2·13 합의’를 토대로 평화적인 북핵 폐기 노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화적인 핵 폐기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제Ⅲ장부터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CTR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

CTR 개념의 기원은 1991년 11월 27일 미 상원의 닌(Sam Nunn)과 루가(Richard Lugar) 의원이 발의한 「소련의 핵위협 제거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소련 붕괴 이후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관리하고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기초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등 4개 공화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 1. 법적 근거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 공산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동구권은 엄청난 정치적, 안보적 혼란을 겪었다. 특히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에는 소련의 핵무기가 배치되었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관련 시설들이 산재해있었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991년 모스크바에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핵기술과 핵물질의 해외유출을 막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고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련의 핵무기를 해체하고 잔존 핵전력과 관련 하부구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로 탄생한 것이 바로 'CTR 프로그램'이다. 최초 입법의원들의 이름을 따서 '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CTR 프로그램의 법적인 토대는 1991년 11월 27일 소련 핵무기의 확산 방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미 상원의

년과 루가 의원이 발의한 ‘소련의 핵위협 제거 법안’, 일명 ‘년-루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유럽재래식군축조약’(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의 이행을 위한 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문서화되었는데, 당시 미 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제안보 상황의 변화에 주목했다.<sup>6</sup>

-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서방측에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도 소련이 핵무기를 저장, 이송, 해체 및 파괴하는 데 대한 미국의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는 핵무기의 안전과 안정유지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험을 제기했음. ①핵무기의 안전이나 국제평화를 고려하지 않는 소련의 공화국 혹은 소련의 지위를 계승하는 세력이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②핵무기와 부품의 탈취, 도난, 판매 및 사용의 위험, ③소련 핵무기와 핵무기 부품, 핵무기 제조 기술이 소련 밖으로 이전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핵확산이 발생할 위험.
-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련 핵무기의 이전과 저장, 보관 및 폐기를 촉진하고 핵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함.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미 의회는 CTR 프로그램에 특별예산을 배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다.<sup>7</sup>

<sup>6</sup>- *Soviet Nuclear Threat Reduction Act of 1991, H.R.3807 (P.L. 102-228)* (November 27, 1991), SEC. 211. NATIONAL DEFENSE AND SOVIET WEAPONS DESTRUCTION.

<sup>7</sup>- *Ibid.*, SEC. 212. AUTHORITY FOR PROGRAM TO FACILITATE SOVIET WEAPONS DESTRUCTION.

I
II
III
IV
V
VI
VII

- 핵무기, 화학무기 및 기타 무기의 폐기
- 이들 무기의 해체 과정에서 이송, 저장, 해체 및 보관
- 이들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검증 가능한 보장조치 구축. 이를 위해서 무기의 해체와 확산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는 것도 포함됨.

CTR 프로그램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적절한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은 CTR 프로그램을 ‘다른 수단에 의한 방어’(defense by other means)라고 표현한 바 있다.<sup>8</sup> 결과적으로, CTR 프로그램은 핵비확산 분야의 마샬 플랜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는 만큼, CTR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sup>9</sup>

CTR 프로그램은 1991년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역할과 임무를 확대해왔는데,<sup>10</sup> 적어도 네 차례의 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93년에는 CTR 법안이 1994년도 국방예산의 일부로 포함되었는데, 여기서 CTR 활동과 자금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이 법안이 채택된 이후, CTR 프로그램은 다른 임무에 할당된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 행정부 내 각 부처의 전문가들이 CTR 프

<sup>8</sup>- Amy Woolf, “Nonproliferation and threat reduction assistance: U.S. programs in the former Soviet Union,” *CRS Report for Congress, RL31957* (April 19, 2005), p. 6.

<sup>9</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Center fo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ptember 2004), pp. 1-2, <<http://www.ndu.edu/ctnsp/publications.html>>.

<sup>10</sup>- CTR 프로그램 관련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Appendix II of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GAO-05-329 (June 30, 2005).

로그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를 이어서, 1997년부터는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가 각자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자체적인 예산과 임무를 갖고 CTR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sup>11</sup>

둘째, 1996년에는 최초로 CTR 프로그램의 토대를 만들었던 샘 님과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피트 도미니치 상원의원과 ‘년-루가-도미치니 법안’이라고 명명된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방어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구소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년-루가 프로그램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도시를 WMD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2</sup> 즉 년-루가-도미치니 법안은 테러 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적 차원의 준비를 강화하고 관련 연방기관에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sup>13</sup>

셋째, 2003년 11월 미 의회는 년-루가 법안을 확대한 ‘년-루가 확대 법안’을 2004년 국방예산법안의 일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1308절은 년-루가 확대 법안의 목적이 지금까지 구소련의 영토로 한정되어 있던 년-루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이 부상하는 WMD 확산 위협을 막고 미국의 장기적인 비확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CTR 프로그램의 역할과 성과를 재평가한 부시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sup>11</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p. 5.

<sup>12</sup>- This Act was adopted in *Public Law 104-201* on September 23, 1996. Nunn-Lugar report, August 2005, <[http://lugar.senate.gov/reports/Nunn-Lugar\\_Report\\_2005.pdf](http://lugar.senate.gov/reports/Nunn-Lugar_Report_2005.pdf)>.

<sup>13</sup>-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Volume I, Domestic Preparedness Program in the Defense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y 1, 1997), <<http://www.fas.org/spp/starwars/program/domestic/1.html>>.

I
II
III
IV
V
VI
VII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sup>14</sup> 예를 들어, 2004년 2월 11일 미 국방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WMD 확산과의 전쟁을 위한 일곱 가지 구상을 밝혔는데,<sup>15</sup>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CTR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2004년 한 해에만 5천만 달러의 예산을 구소련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CTR 관련 기금이 최초로 구소련 이외의 지역인 알바니아에서 화학무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사용된 바 있다. 년-루가 확대 법안에 따라서 미국은 또한 구소련 이외의 나라에서 ‘핵물질의 보호·통제·산정’(Materials Protection, Control, and Accounting: MPC&A)을 실시하기 위해서 5백만 달러를 지출했고, 다른 나라들의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추가로 5백만 달러를 사용했다. 루가 상원의원은 구소련 이외의 지역에서 CTR 관련 기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조항을 철폐하는 별도의 법안을 2004년과 2005년에 발의하기도 했다. 화학무기 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5천만 달러)을 철폐하도록 한 것이 한 예이다.

<sup>14</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p. 6.

<sup>15</sup>- 부시 대통령이 제의한 일곱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확대함, ②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적 법규를 강화함, ③WMD와 위험한 물질이 나쁜 단체에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확대함, ④확산의 위험을 없애면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⑤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만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⑥보장조치와 검증 체계구축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IAEA 이사회에 신설함, ⑦확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는 국가는 IAEA 이사회나 특별위원회에 회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President announces new measures to counter the threat of WMD*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ebruary 11, 2004),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2/20040211-4.html>>.

## 2. CTR 프로그램의 이행과 성과

CTR 프로그램은 미 행정부 안에서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상무부 간의 협조체제 하에 진행되고 있다.<sup>16</sup> 국방부는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무기의 보관 및 해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고, 국무부는 CTR 프로그램의 대상국가들과 협상을 실시하고 다양한 협정을 맺는 것이 주 임무였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각각 과학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핵물질과 핵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통제를 책임졌고, 핵무기 제조에 종사했던 과학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상무부는 주로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1년 년-루가 법안이 채택된 후 이듬해인 1992년에 최초로 CTR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국방부의 예산을 전용한 4억 달러였다. 이후 CTR 프로그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세균무기까지 처리하도록 임무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는 매년 1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가 분담해서 지출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구소련 지역에서 CTR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미 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금액은 약 120억 달러에 달한다.<sup>17</sup>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가 지금까지 수행한 활동상황과 달성한 성과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sup>16</sup>- Amy Woolf,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97-1027F* (March 23, 2001), p. 5.

<sup>17</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p. 13.

I
II
III
IV
V
VI
VII

## 가. 국방부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 국방부는 CTR 프로그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sup>18</sup>

- 구소련의 WMD와 관련 하부구조를 폐기함.
- 구소련의 WMD와 관련 기술 및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
-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행동기준을 장려함.
-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협력을 강화함.<sup>19</sup>

부시 대통령은 이상의 네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CTR 프로그램이 2002년 12월, 2004년 4월 및 2005년 4월에 각각 공표된 WMD, 21세기 세균무기방어, 그리고 국내 핵탐지에 관한 ‘대통령국가안보명령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s)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20</sup> 국방부는 1992년 이후 매년 4억 달러 정도의 CTR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sup>21</sup> 아래 <표 III-1>에서 보듯이, 국방부가 신청한 CTR 예산

---

<sup>18</sup>-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nual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 2006* (Washington, D.C.: The Department of Defense, December 2004), p. 1, <[http://www.ransac.org/documents/fy06\\_ctr\\_annual\\_report\\_to\\_congress.pdf#search='Cooperative%20Threat%20Reduction%20Annual%20Report%20to%20Congress'](http://www.ransac.org/documents/fy06_ctr_annual_report_to_congress.pdf#search='Cooperative%20Threat%20Reduction%20Annual%20Report%20to%20Congress')>.

<sup>19</sup>-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부가 제시했던 네 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핵, 화학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함, ②이들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송, 저장, 불능화하거나 보관함, ③이들 무기와 부품 및 무기급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구축함, ④다른 국가의 WMD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과학자와 기술의 유출을 방지함.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April 1995), p. 4.

<sup>20</sup>-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nual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 2007* (Washington, D.C.: The Department of Defense, 2006), p. 1, <[http://www.nti.org/e\\_research/official\\_docs/dod/2006/040705.pdf#search='Cooperative%20Threat%20Reduction%20Annual%20Report%20to%20Congress'](http://www.nti.org/e_research/official_docs/dod/2006/040705.pdf#search='Cooperative%20Threat%20Reduction%20Annual%20Report%20to%20Congress')>.

<sup>21</sup>- 포괄적인 의미에서 CTR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및 상무부가 관리하는 프로그



은 의회에서 거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sup>22</sup>

<표 III-1> 국방부의 CTR 예산: 요청과 승인

(백만 달러)

회계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요청규모	\$400	\$400	\$400	\$400	\$371	\$328	\$382.2	\$440.4
승인규모	\$400	\$400	\$400	\$400	\$300	\$364.9	\$382.2	\$440.4
회계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요청규모	\$475.5	\$458.4	\$403	\$416.7	\$450.8	\$409.2	\$415.5	
승인규모	\$475.5	\$443.4	\$403	\$416.7	\$450.8	\$409.2	\$410.4	
총 요청규모 (FY1992~FY2006) \$6150.5					총 승인규모 (FY1992~FY2006) \$6096.4			

국방부의 CTR 예산은 핵무기와 하부구조를 해체하는 데 사용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I-2>에서 보듯이, 2005년 6월 현재, 6,600 개 이상의 핵탄두가 해체되었다.<sup>23</sup> 냉전시대 ‘전략적 3축’(Strategic Triad)으로 각광받던 무기체계의 경우 폐기된 수를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 582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이 549기, 그리고 전략폭격기가 148대에 달한다. 주요 무기체계와 하부구조 별로 2007년과 2012년까지 예상되는 폐기 숫자도 <표 III-2>에 소개되었다.

램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CTR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만을 지칭한다. CTR 기금이란 CTR 프로그램에 할당된 국방부의 예산을 말한다.

<sup>22</sup>- <표 III-1>은 다음 도표를 토대로 재작성한 것이다. Table 1(CTR funding: requests and authorization) of Amy Woolf, “Nonproliferation and threat reduction assistance: U.S. programs in the former Soviet Union.”

<sup>23</sup>- Jeffrey Read, “Reported accomplishments of selected threat reduction and nonproliferation programs,” *RANSAC Policy Update* (July 2005), p. 2, <[http://www.ransac.org-threat\\_reduction\\_accomplishments\\_2005.pdf](http://www.ransac.org-threat_reduction_accomplishments_2005.pdf)>.

I
II
III
IV
V
VI
VII

<표 III-2> 핵무기와 하부구조의 폐기 현황

폐기대상	폐기현황 (2005년 6월 6일 현재)	2007 예상 폐기현황	2012 예상 폐기현황
핵탄두	6,632	7,792	8,567
ICBM	582	766	1,140
ICBM 사일로	477	485	485
ICBM 이동식 발사대	30	139	355
전략 폭격기	148	150	150
공대지 핵미사일	789	829	829
SLBM 발사대	420	472	572
SLBM	549	609	669
핵잠수함	28	32	32
핵실험용 터널과 입구	194	194	194

국방부는 이미 설정한 네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다.<sup>24</sup> 첫째, 구소련 내에서 WMD 능력을 다시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에는 ICBM 액체연료 공장, 전략 폭격기가 주둔하는 공군기지, 핵탄두 저장소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저장이나 이송과정에 있는 핵탄두의 안전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사업인데, 저장시의 안전관리와 이동시의 안전관리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셋째,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화학무기의 원료물질을 폐기하는 것이다. 넷째로, 세균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막는 세균무기방지 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무기급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핵물질 저장·관리 사업이다.

<sup>24</sup>- Ibid., pp. 3-6.

## 나. 국무부

미 국무부는 CTR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금과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sup>25</sup> ‘비확산 군축기금’(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 NDF)은 WMD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WMD와 운반수단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첨단 재래식 전력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93년부터 비확산 군축기금으로 매년 1,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사업 가운데 하나는 WMD 전문가 유출방지 사업인데, 과거에 핵무기 제조에 관여했던 과학자들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첫째,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각각 ‘국제과학기술센터’(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STC)와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of Ukraine: STCU)를 운영하는 것이다. 원래 이 사업은 구소련과 미국 과학자들 간에 실험실 차원의 교류협력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구센터까지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험실 차원의 교류협력은 두 나라 연구진 사이에 신뢰를 증진하고 불신을 해소하면서 연구센터의 설립이라는 보다 큰 규모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sup>26</sup>

ISTC와 STCU는 구소련의 핵무기 개발·제조에 관여했던 과학자들로 하여금 평화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sup>25</sup>- *Ibid.*, pp. 9-11.

<sup>26</sup>- Richard Stone, “News focus,” *Science* (January 13, 2006), p. 171.

다국적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연구센터는 과학자들에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시키기도 하며, 이들이 국제과학커뮤니티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ISTC와 STCU는 비록 과거에는 무기를 만드는 데 종사했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들에게 과거를 떨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인 전환’(Human-Oriented Conversion)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STC가 모스크바에 설립된 것은 1992년인데, 2000년 11월 현재,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400여 개 연구소에서 선정된 3만여 명의 과학자들이 1,156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예산은 3억 달러가 넘게 소요되었다. STCU는 1995년 키예프에 설립되었는데, 2000년 중반 현재 네 개의 구소련 공화국 출신 과학자 6,700여 명이 290개 연구과제에 종사했고, 당시 예산은 4,200만 달러였다.<sup>27</sup> 2005년 현재, ISTC에서는 58,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2,100여 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STCU는 2004년 9월 현재, 13,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은 ‘생화학 재조정’(Bio-Chem Redirection)으로서, 이 사업은 구소련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제조하는 데 종사했던 과학자들에게 평화적이고 민간 차원의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사업은 ‘세균산업에 관한 구상’(Bio-Industry Initiative)으로서 9·11 테러 이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다. 구소련 지역의 세균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과 백신 제조를 임무로 한다.

---

<sup>27</sup>- *Nuclear Status Report: Nuclear Weapons, Fissile Material, and Export Controls in the Former Soviet Union* (Monterey: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2001), pp. 68-74.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은 ‘수출통제 및 국경안전’(Export Control and Border Security: EXBS) 프로그램이다. EXBS 사업은 위험한 물질과 기술의 불법수출과 밀매를 근절한다는 목표 하에 특히 유라시아 지역의 확산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국으로 하여금 국내법 절차를 정비하고 국경수비 역량을 확충해서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 다. 에너지부

에너지부 역시 다음과 같이 독자적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CTR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sup>28</sup> 첫째, ‘지구적 확산방지 구상’(Global Initiatives for Proliferation Prevention: GIPP)은 핵·화학·세균무기 개발에 종사했던 소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전문성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소련 내에서 평화적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5년 4월 현재, 750개 이상의 평화적인 프로젝트에 16,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고용되었고, 3,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GIPP에 의거해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소위 ‘핵도시구상’(Nuclear City Initiative: NCI)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sup>29</sup> NCI 프로젝트는 그 동안 핵무기 개발만을 위해서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비밀리에 존재했던 소련 내의 몇 개 비밀도시, 일명 핵도시를 일반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이었다. 핵도시에 일반적인 상업기능이 작동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

<sup>28</sup>- Jeffrey Read, “Reported accomplishments of selected threat reduction and nonproliferation programs,” pp. 6-9.

<sup>29</sup>- Amy Woolf, “Nonproliferation and threat reduction assistance: U.S. programs in the former Soviet Union,” p. 34.

I
II
III
IV
V
VI
VII

시함으로써 핵도시에 거주하던 WMD 관련 인사들과 그들의 지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NCI의 주된 목적이었다.

둘째, 에너지부는 구소련 핵시설의 ‘핵물질의 보호·통제·산정’(MPC&A)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물질 보호 및 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테러집단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①핵무기 제조 현장에서부터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함, ②국경과 해안에 방사능 탐지장비를 설치해서 1차 통제라인을 벗어난 도난 사건에 대한 추가 차단을 실시함. 핵물질 보호, 통제 및 산정 사업은 1993년에는 3백만 달러도 채 안되는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1995년에는 7천 3백만 달러, 그리고 2001년에는 1억 6천 9백만 달러가 지출되는 등, 해가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미 의회가 이 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총 18억 달러에 달한다.<sup>30</sup> 이 돈이 모두 소련 내 핵무기의 관리와 통제에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핵안전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은 현재 러시아내의 105개 장소와 243개 건물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부는 2004년 5월 26일 ‘지구적 위협감소 구상’(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GTRI)을 발표했다. GTRI는 테러집단이 핵무기나 방사능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의 소재와 보관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제거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넷째, HEU 투명성 증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국이 1993년부터

---

<sup>30</sup>- *Ibid.*, p. 28.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고농축우라늄이 핵탄두를 해체해서 나온 것임을 보장함으로써, 러시아의 핵폐기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섯째,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금지’(Elimination of Weapons Grade Plutonium Production: EWGPP) 사업이다. 이 사업은 러시아로 하여금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폐쇄하고 대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와 난방용 열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핵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플루토늄을 ‘혼합산화’(Mixed Oxide: MOX) 연료로 만들어서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사용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가 지출한 CTR 관련 비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31</sup> 그림에서 3단 막대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국방부의 경우 매년 평균 4억 달러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반면에,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지출 수준은 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단 막대의 밑 부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부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핵물질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부의 임무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되는 핵무기의 수가 많아지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핵물질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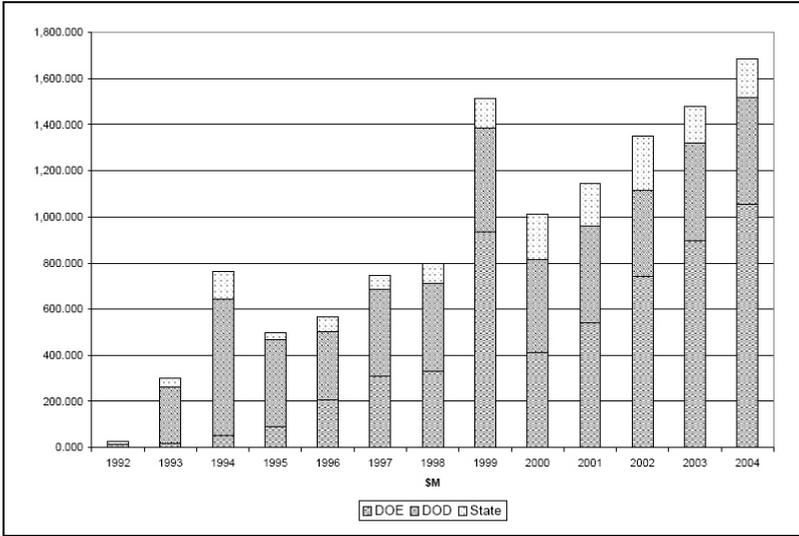
2005년의 경우 부시 대통령은 총 10억 달러를 CTR 예산으로 신청했

<sup>31</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p. 14.

I
II
III
IV
V
VI
VII

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부가 4억 7천 200만 달러, 국방부가 4억 9백만 달러, 국무부가 1억 8백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Ⅲ-1> 미 행정부의 CTR 프로그램 지출예산 (1992~2004)



### 라. CTR 프로그램의 시사점

CTR 프로그램은 샘 넌과 리처드 루가라는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R 프로그램은 지난 15년 동안의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점은 앞으로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CTR 프로그램이 당면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파를 야기하고,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때로는 관련국 간에 외교마찰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WMD 확산과 그에 따른 안보위험에 관한 불협화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CTR 프로그램이 직면했던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32</sup>

### (1) 정치적 관심의 약화

CTR 프로그램이 미 상원의 영향력있는 두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CTR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선언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확인된 적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는 CTR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주요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던 내부 보안절차와 관료적인 문제들을 제거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의 제약, 부처간 갈등 및 이행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sup>33</sup>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CTR 예산이 러시아에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미국이 제공하는 돈으로 구식 핵무기를 해체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신형 핵전력을 증강하

<sup>32</sup>- Kenneth Luongo and William Hoehn III, "Reform and expans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rms Control Today* (June 2003), pp. 11-15.

<sup>33</sup>-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전문가인 위트(Joel Wit)와 울프스탈(Jon Wolfsthal)은 CTR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내의 회의적인 시각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 회의에서 필자와의 의견교환, *The Workshop on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for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sponsored b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Sejong Institute, January 28, 2005, Seoul, South Korea.

I
II
III
IV
V
VI
VII

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부 내에서 CTR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적, 절차적 장애를 조성해서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예산투쟁 과정에서 CTR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sup>34</sup>

## (2) 접근성과 투명성의 문제

CTR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고질적이고 만연된 문제였다. 러시아 측은 시설접근과 정보공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간첩행위와 다름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요구를 거부당한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 당국에 대한 불만표출은 물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러시아는 CTR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자국의 핵탄두와 핵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더 이상의 물리적인 방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다른 러시아 관리들은 CTR 프로그램과 나중에 설명하게 될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G8 Global Partnership Program)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가급적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려 했다. 심지어 러시아가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출연하는 모든 지원금을 다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sup>35</sup>

---

<sup>34</sup>- Rose Gottemoelle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beyond Russia,”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5), pp. 145-146.

<sup>35</sup>- *Ibid.*, p. 149.

### (3) 관리 책임자와 종합전략의 부재

미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CTR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를 정점으로 해서 CTR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4) WMD 과학기술자들의 처리 문제

WMD 개발에 종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평화적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데는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그 하나는 연구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의 상업화였다. 그러나 두 전략이 많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구계약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만 계약기간이 3년을 넘지 않고 그 이후의 일거리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과 장래의 불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었다. 기술의 상업화 전략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시장의 필요성에 제대로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했던 러시아의 특성상 시장성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애가 많아서 특정 기술의 상업화를 통한 사업이 성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5) 예산

CTR 프로그램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과 지원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CTR 프로그

I
II
III
IV
V
VI
VII

램에 반대하는 측은 자기들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CTR 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예산지원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러시아가 CTR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은 차기년도 예산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미국이 CTR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에너지부 장관이 조직한 초당적인 태스크 포스는 CTR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태스크 포스의 보고서인 ‘베이커-컷틀러 보고서’(Baker-Cutler report)는 구 소련이 보유한 핵물질과 핵탄두의 안전한 처리라는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8-10년간 3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sup>36</sup>

---

<sup>36</sup>-Howard Baker and Lloyd Cutler, *A Report Card on the Department of Energy's Nonproliferation Programs with Russi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nergy, January 10, 2001), p. A-1.



9·11 사태와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주지하는 바와 같이, 9·11 테러사태는 냉전 종식 이후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세계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9·11 사태는 크게는 국제안보질서, 좁게는 CTR 프로그램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WMD 폐기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했다. 이 사태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1. 9·11 사태의 영향

### 가. 미국인의 안보인식 변화

9·11 테러사태는 안보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킨 사건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진주만 침공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9·11 테러는 200년 미국 역사의 치욕이자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서 미 본토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무모함과 잔학성 그리고 야만성의 표적으로 미국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며,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한 미국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대사건이었다.

### 나. 새로운 안보위협과 새로운 대응수단의 등장

테러 그 자체는 새로운 안보위협이 아니며 과거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는 테러가 야기하는 피해범위, 형태 및 조장하는 공포의 측면에서 과거의 소규모 테러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안보위협이자 국제적 불안정 요인이 등장했음을 보여주었

다. 특히 테러행위자들이 핵·화학·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세계적 대재앙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점으로 작용

9·11 테러사태는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이 테러사태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미 정부당국자들은 9·11 테러에 대한 입장을 갖대로 미국에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축출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고,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명분도 후세인 정권의 WMD 개발과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도 계속 테러와의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라. 미·러 관계의 강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9·11 테러 발생 이후 부시에게 최초로 위로 전화를 걸었고, 정보협조와 미 군용기에 대한 영공개방 조치를 단행했으며, 중앙아시아국들에게 미국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에 대해 무기를 지원했다. 아울러 테러사태 당시 실시 중이던 군사훈련을 취소해서 미국을 안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이와 같이 미국에 적극 협조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2001년 9월 이후 양국 관계가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러 관계가 보다 긴밀해졌다는 사실은 이후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러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러시아 역시 체첸반군에 의한 테러로 골치를 썩고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VI
VII

## 마. 대량살상수단의 다변화와 확산으로 인한 위협 증가

9·11 테러는 의지만 있다면 가장 원시적인 수단으로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범케이스였다. 강력한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적대세력이 세계 도처에서 9·11 사태와 유사한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기도 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구소련이 해체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명살상용 기술의 확산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나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가들뿐 아니라 소규모 테러집단도 치명적인 화학·세균무기를 획득해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미 빈 라덴 조직이 핵·화학·세균무기 구입을 시도했다는 많은 정황 증거가 밝혀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우편물을 이용한 탄저균 살포 사건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인들의 경계심은 미국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 발생 6개월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모든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재앙적 규모의 테러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들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나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9·11 테러사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 2.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9·11 사태의 충격으로 평화적인 핵폐기 분야에서 생긴 것이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G8 Global Partnership Program)인데, 이는



CTR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11 사태가 초래한 안보질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태가 CTR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확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그 하나는 CTR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구소련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로 넓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CTR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도 G8 국가와 더불어 다른 나라들로 확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G8 국가들은 테러집단이나 테러집단을 보호하는 국가가 핵, 화학, 세균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관련 장비와 물질 및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러한 약속은 2002년 6월 27일 캐나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여섯 가지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G8 국가들은 또한 CTR 형태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비확산과 군축, 테러방지 및 환경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양자 혹은 다자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G8 국가들은 2012년까지 2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미국이 출연하기로 했다. 미국이 담당하는 100억 달러는 미국 정부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CTR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지출한 1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006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혜국이다.<sup>37</sup>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G8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자

<sup>37</sup>-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역사와 협력의 범위, 한계, 회원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Vladimir Orlov, ed., Guidebook: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oscow: Human Rights Publishers, 2006).

I
II
III
IV
V
VI
VII

리 잡았다. G8 정상들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빠짐없이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발표된 ‘에비앙 행동계획’(Evian Action Plan)과 2004년의 ‘시 아일랜드 행동계획’(Sea Island Action Plan)은 G8 국가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담고 있다.<sup>38</sup> 2005년 정상회담에서도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G8 정상들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담은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sup>39</sup> 2006년도 세인트 피터스버그 정상회담에서도 G8 정상들은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을 화학무기 폐기, 핵잠수함 해체, 핵물질 처리와 보호 및 무기개발에 종사한 과학자 관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성과를 평가했으며, 구소련 공화국들의 가입 문제를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sup>40</sup>

---

<sup>38</sup>- G8 Senior Group, *G8 Global Partnership Annual Report* (June 2005), <[http://www.fco.gov.uk/Files/kfile/PostG8\\_Gleneagles\\_GPWGAnnualReport\\_2005.pdf](http://www.fco.gov.uk/Files/kfile/PostG8_Gleneagles_GPWGAnnualReport_2005.pdf)>.

<sup>39</sup>- *Gleneagles Statement on Non-Proliferation* (June 2005), <[http://www.fco.gov.uk/Files/kfile/PostG8\\_Gleneagles\\_CounterProliferation.pdf](http://www.fco.gov.uk/Files/kfile/PostG8_Gleneagles_CounterProliferation.pdf)>.

<sup>40</sup>- *Report on the G8 Global Partnership* (St. Petersburg, July 16, 2006), <<http://en.g8russia.ru/docs/22.html>>.





##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

---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는 북한 핵의 평화적인 폐기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두 나라는 모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무기(우크라이나)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리비아)을 포기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하에 평화적인 핵 폐기를 실현했다. 두 나라가 제기한 핵확산 문제의 기원과 동기는 달랐지만, 양국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종착점은 같았다. 즉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 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 경제, 안보적 보상과 대가를 챙긴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구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로서 앞서 소개한 미 행정부의 CTR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대상국이다. 소련 붕괴 과정에서 네 공화국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계해서 핵무기와 관련 하부구조를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및 관련 장비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리비아의 경우에는 북한과 같이 불량국가로 지목되던 과거의 행적에서 벗어나서 평화적으로 WMD 능력을 폐기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준 사례로 꼽힌다. 어쩌면 모험과도 같을 수 있었던 리비아 당국의 WMD 포기 결심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1. 우크라이나

냉전이 종식되던 당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구소련의 네 개 공화국(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들은 러시아가 구소련



의 핵보유국 지위를 계승하고 다른 공화국들은 핵무기와 핵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서,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공화국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소련이 해체되던 당시에 1,9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다. 그 결과, 1994년 1월 14일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열린 러시아 대통령은 크라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sup>41</sup>

-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회원국들의 독립성과 주권 및 국경선을 존중하고, 국경의 변경은 평화적인 방법과 합의된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함.
- 회원국의 영토적, 정치적인 독립성에 반하는 무력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삼감.
- 유엔헌장에 의거하거나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나라의 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 경제적인 압박수단을 사용하여 CSCE 회원국의 주권 행사를 자국의 이익에 종속시키고 실리를 얻는 것을 삼감.

<sup>41</sup>- *Trilateral Statement by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January 14, 1994).

I
II
III
IV
V
VI
VII

- 우크라이나가 핵무기의 공격이나 공격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강구함.
-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비핵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음. 다만, 핵보유국과 관련을 맺은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혹은 두 나라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는 예외임.

1994년 12월 5일에는 위와 유사한 안보 공약을 미국, 러시아 및 영국이 함께 제공하기도 했다.<sup>42</sup> 이상과 같은 안보 공약의 토대 위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핵 폐기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안보 공약은 우크라이나가 안심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토대가 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핵관련 시설이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니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민간분야로 전환되어 과학기술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은 재활용되었다. 키에프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핵을 포기하는 데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는 것, 즉 최고 지도층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웃 러시아가 핵보유 강국이기 때문에 소규모 핵을 갖는 것이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불안을 자극해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

<sup>42</sup>-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cember 5, 1994).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구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즉 핵무기와 관련 물질 및 장비의 소재와 규모 그리고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미 파악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비밀 핵개발을 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소규모의 핵전력을 가지고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소규모 핵전력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호성의 결여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로 하여금 핵 전력 유지라는 옵션의 가치를 크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는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다. 또한 신생국가로서 국가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의 깨끗한 이미지가 외부의 지원을 도왔고, 또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핵 포기를 촉진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었던 이와 같은 요인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평화적인 북핵 폐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를 보면, 북한정권이 얼마나 핵개발에 집착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핵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만과 집요함’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집요하게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기만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핵개발에 대한 철저한 부인 속에서 이뤄졌던 북한의 주요 기만행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 생존 당시부터 2003년 4월 3자회담에서 북한 당국자가

I
II
III
IV
V
VI
VII

핵 보유를 시인하기 전까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1977년 10월 일본 NHK 논설위원장과의 대담에서였다. 이후 김일성은 1991년 9월 26일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의 대담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단언했고, 1992년 신년사와 같은 해 2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특히 김일성은 오찬 담화에서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 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멸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초에서 북한은 1991년 12월 남한과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면서 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실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이미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적어도 세 차례 재처리를 실시하고 플루토늄까지 추출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김일성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을 만나서 오찬연설을 하던 당시에 이미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었다. 공장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보유·가동했고, 이를 통해서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 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0~14kg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과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은 김일성의 이런 연설이 완전히 허구였다는 것을 입증한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

둘째,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과 이 선언의 이행을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거해서 농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칸 (Abdul Qadeer Khan) 박사가 주도한 핵 밀거래 네트워크가 발각되면

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파키스탄으로부터 농축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들여오는 등 양국 간에 긴밀한 핵개발 협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아직도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2006년 9월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서전에서조차 칸 박사와 북한사이의 핵 밀거래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정도로 증거는 많다.

셋째, 북한은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하면서도 핵개발 의사는 없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3년 4월 하순 북경 3자회담에서 이근 수석대표가 켈리 차관보에게 핵무기 보유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정부성명을 불과 3개월 만에 뒤집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아직 많은 사항들이 베일에 가려져있다. 특히 2002년 12월 영변에 머물던 IAEA 사찰관들이 추방된 이후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통제는 완전히 해제된 상태이다. 북한 당국은 또한 HEU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협조자였던 파키스탄 당국이 나서서 증거를 제시하고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HEU 프로그램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최근 북한의 HEU 프로그램 규모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면서 HEU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2007년 2월 27일 디트라니(Joseph DeTrani)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공장규모의 HEU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공장규모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sup>43</sup> 2002년 10월 HEU

<sup>43</sup>- 디트라니의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음. “While there is ‘high confidence’ North Korea acquired materials that could be used in a production-scale uranium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북한이 HEU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이 HEU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HEU 활동이 보다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①비밀 HEU 프로그램의 노출에 따른 대외 보안 강화, ②HEU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③안보리 결의안 1540호와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등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확산방지 노력 강화.<sup>44</sup>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나라이다. 핵문제에서만 보더라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은 물론,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 기본합의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거니와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잘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핵 억제력’이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핵실험을 완벽한 성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핵 억제력의 증강을 공언해 온 북한이 핵개발의 마지막 금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까지 실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의 북한과 그 이후의 북한은 다를 수밖에 없다.

---

program, there is only ‘mid-confidence’ such a program exists.” Glenn Kessler, “New doubts on nuclear efforts by North Korea,” *Washington Post*, March 1, 2007.

<sup>44</sup> 전성훈,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통일정세분석 2007-05)』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1-12.

기만과 집요함에 바탕을 둔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 정권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 2. 리비아

리비아 외무부는 2003년 12월 WMD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해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약’(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및 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국제사회는 리비아의 이러한 결정을 신성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테러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한 나라의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표였기 때문이었다.

리비아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리비아의 지도자 가다피는 미국으로부터 대통령궁을 공격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던 사람이었지만, 세계가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WMD를 포기하는 것이 WMD를 갖는 것보다 리비아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다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자신을 따라 WMD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고통에 눈을 돌리라는 충고까지 했다.<sup>45</sup>

리비아 정부는 WMD 포기 약속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나갔다. 포기를 약속한 직후인 2003년 12월, WMD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및 영국에게 공개했다. WMD 개발 능력, 관련 시설과 장비, 설계도면 및 물질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일차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리비아 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서 WMD 능력에 대한

<sup>45</sup>- 『조선일보』, 2003년 12월 23일.

I
II
III
IV
V
VI
VII

신속한 해체가 이뤄질 수 있었고, 리비아가 보여준 투명성과 협력은 CTR 프로그램의 각종 기술과 도구들을 다른 나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되었다.<sup>46</sup>

리비아는 1980년대부터 비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2개의 시설을 공개하고 IAEA에 대해 최대한의 접근을 허용할 것과 추가의정서에 의거해서 집중적인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18개 시설도 공개했다.<sup>47</sup> 2004년 1월 22일, 리비아가 확보한 핵무기 설계정보는 미국으로 보내졌고, 며칠 후에는 리비아가 보관하고 있던 5만 5천 톤의 핵물질이 미국으로 공수되었다. IAEA는 밀도 있는 사찰을 통해서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로서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최소한 3년에서 최대한 7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결론지었다.<sup>48</sup>

현재 미 행정부는 국무부의 비확산 군축기금(NDF)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할당받아서 리비아의 WMD 폐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리비아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는 데는 2년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국방부의 예산지원은 쉽지 않았다.<sup>49</sup> 테러리즘을 지원한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군사물자의 수출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통제한다(수출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셋째, 경제지원을 금지한다. 넷째, 해당국가가 세계은행이나 IMF의 차관을 받는 것에 반대하고 10만 달

---

<sup>46</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pp. 33-34.

<sup>47</sup>-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of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GOV/2004/12* (February 20, 2004).

<sup>48</sup>- James Goodby,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p. 34.

<sup>49</sup>- Sharon Squassoni and Andrew Feickert, "Disarming Liby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S21823* (April 22, 2004), p. 6.



리를 초과하는 계약은 미 국방부와 할 수 없는 등 금융차원의 제재가 있다.<sup>50</sup> 물론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국방부의 CTR 기금 일부를 리비아 과학기술자들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루가 상원의원은 리비아에 할당된 NDF의 규모와 사용범위가 폐기임무와 과학기술자 재고용 및 장기적인 비확산 노력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51</sup>

리비아 정부의 단호한 결정과 신속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고, WMD 포기 결정 이후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리비아를 불량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일은 없어졌고, 가다피 국가원수를 비난하는 발언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정부는 리비아의 WMD 포기 결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했다. 미국이 취했던 대부분의 경제제재는 2004년 봄에 해제되었고,<sup>52</sup> 연락사무소도 같은 해 6월 28일 설치되었다. WMD 포기 결정을 내린 지 불과 6개월 만에 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개시 및 경제제재 해제라는 커다란 선물 두 개를 챙기게 된 것이다. 이후 2006년 5월 리비아 주재 미 연락사무소가 대사관으로 승격되었고,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06년 6월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sup>53</sup>

<sup>50</sup>- Sharon Squassoni,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RL32359* (January 27, 2005), pp. 34-35.

<sup>51</sup>- Senator Richard Lugar, *Opening statement for hearing on Libya next step in U.S. bilateral relation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ebruary 26, 2004).

<sup>52</sup>- 2004년 2월 26일 미국 백악관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①리비아에서 미국 여권의 사용금지를 해제함, ②미국 시민의 리비아 여행을 허가함, ③미국 기업이 리비아와 상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함, ④리비아가 워싱턴에 외교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권유함, ⑤리비아와 인도적인 프로젝트를 모색함.

<sup>53</sup>- 정형곤·나승권·박철형,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

I
II
III
IV
V
VI
VII

미국은 리비아의 건설적인 조치에 긍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신이 먼저 우리가 원하는 WMD 포기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결국 리비아의 WMD 포기는 불량국가로 하여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WMD를 포기하게 만드는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폐기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도 ‘리비아 식’ 평화적 핵 폐기이다.

미국이 리비아와의 관계정상화 방침을 표명한 시점은 북핵 폐기를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끝난 직후였다. 따라서 미-리비아 관계정상화 발표 시점은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핵포기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북·미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3개월 간의 동결기간을 제시하고 이 기간 중에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핵능력 폐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리비아를 이용해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리비아 관계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제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체결되었지만,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리비아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당국과 상당히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핵

---

에의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제07-17호)』(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 5), p. 10.

포기 결정에 이르게 되었지만, 북한과 미국 간에는 이러한 대화채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상당한 양자접촉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리비아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리비아 당국이 팬암 미 항공기 테러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높아졌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사실이다. 공식협상이건 비밀협상이건 간에, 협상의 최소한의 요건은 허심탄회한 협상이 가능하고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당사자 간의 신뢰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 온 행태를 돌아볼 때, 북한이 이러한 신뢰를 국제사회에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핵문제에서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기만과 이중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권유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리비아의 사례로부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핵개발에 아무리 많은 돈과 정열을 쏟아 부었다고 할 지라도, 이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정보실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중요한 근거는 이라크가 유엔을 기만하면서 비밀리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국제평화를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즉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심지어 무력사용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교훈인 것이다. 최근에는 이란 역시 핵개발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HEU 프로그램을

I
II
III
IV
V
VI
VII

지속함으로써 유엔의 제재를 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리비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제재가 아니라 보상을, 그리고 정권의 붕괴가 아니고 정권의 지속이라는 선물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이리 저리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시원스럽게 핵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지고 재는 것은 상대방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고,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대한 믿음만 떨어뜨릴 것이다. 협상카드를 잘게 썰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활용하는 소위 ‘샐러미 전술’은 1990년대에 북한이 잘 써먹었던 구식 협상전술이다. 이제 이런 식의 전술에 넘어갈 나라는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물론 핵 포기를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으며,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도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무리 큰 잘못이라고 해도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숨기는 것보다는 낫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국제사회가 그런 북한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리비아는 핵개발 도중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포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두 나라의 핵포기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두 나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아무도 리비아와 남아공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며, 두 나라의 핵개발은 과거의 역사로 사라져버렸다. 북한도 진실하게 고백하고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리비아나 남아공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개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검증과정에서 만에 하나 북한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공

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AE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IAEA는 비교적 중립적인 국제기구로서 때로는 미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조직이다. IAEA를 미국이 활용하는 일개 도구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국제기구가 IAEA이었고, IAEA 사무총장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IAEA와 최대한 협력함으로써 폐기와 검증 과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고, 이는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축적으로 이어졌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리비아, 북한 세 나라 간에 핵 폐기에 관련된 정치적, 전략적 상황을 여덟 가지 지표로 나누어 분석하면 아래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1> 우크라이나, 리비아, 북한의 핵포기 상황 비교

	핵무기	잠재적 위협국	정치적 핵포기 의지	국제적 신뢰	핵폐기 이전의 투명성 정도	외교 안보적 보상	경제적 보상	핵포기 이후 정권지속 여부
우크라이나	보유	러시아	강함	중간	높음	조건부NSA, PSA	비핵화 및 경제개발 지원	지속
리비아	개발중	이스라엘, 미국	강함	낮음	낮음 (비밀 핵 개발)	조건부NSA, PSA,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비핵화 지원	지속
북한	보유	미국, 남한	약함	매우 낮음	낮음 (비밀 핵 개발)	북·미 관계 정상화,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 요구	경제제재 해제, 에너지 및 경제 개발 지원	?

I  
II  
III  
IV  
V  
VI  
VII

비교 대상 세 나라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리비아는 핵무기를 개발하던 중에 핵폐기 단계로 진입했다.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잠재적인 위협국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리비아는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해당된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는 정치적인 핵포기 의지가 강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신생 국가로서 중간정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테러 지원국인 리비아의 국제적 신뢰도는 낮았고,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기본합의 등 합의사항을 위반해 온 북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핵 폐기 이전의 투명성 확보 정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높은 투명성을 유지한 반면에 비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리비아와 북한의 투명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외교안보적 차원의 보상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정에서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과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PSA)을 약속받았다. 리비아는 NPT 회원국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보장 약속에 더해 북·미 관계정상화라는 대가까지 챙겼다. 북한의 경우에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라는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소위 핵군축 회담 요구인 것이다.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CTR 프로그램의 지원을 포함해서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챙겼고, 리비아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더불어 역시 CTR 형식의 핵 폐기에 관련된 지원을 획득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에너지 지원 및 경제개발 지원 등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에서 핵무장 옵션을 포기한 정권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 정권이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길을 답습하리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I

II

III

IV

V

VI

VII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대북 안전보장과 대남 핵우산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북한만은 아니었다.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했었다. 1994년 10월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제Ⅲ항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 공동성명 제1항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전보장 논의의 기원은 NPT 조약이다. 1968년 NPT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핵무장 옵션을 포기하는 비핵국가들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핵보유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한 바 있었다. NPT 체결을 위해서 5개 핵보유국들은 두 가지 안전보장을 해주었는데, 그 하나가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이고, 다른 하나가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PSA)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밝혔듯이, NSA에는 구체적인 조건이 첨부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북한이 안전보장 차원에서 주장하는 대북 핵위협 해소나 주한미군 철수 관련 주장들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의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요구라는 데 있다. 대다수 NPT 회원국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안전보장 약속을 수용하고 있다. 물론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조건부 NSA와 PSA 자체를 거부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3자 협정을 통해서 보장받은 안전보장도 조건부 NSA와 PSA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

하다. 차이가 있다면 NPT의 비핵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장 약속을 미국과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만을 위해서 별도의 문서에서 재확인했다는 것뿐이다.

## 1. 적극적 안전보장

적극적 안전보장(PSA)의 내용은 1968년 NPT가 체결되기 바로 전에, 미국, 소련, 영국 등 3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이다.<sup>54</sup>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NPT에 가입한 비핵국이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의 대상이 되거나 침략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 비핵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안전보장은 NPT 체결 직전인 1968년 6월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55호를 통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핵국들이 적극적 안전보장은 유엔 헌장에 포함된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더욱이 3개국이 발표한 내용은 단지 의사표명일 뿐이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구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sup>5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PSA 자체의 정당성이 부인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PSA는 1995년 4월 11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984호로 확대·개편되었다.<sup>56</sup>

<sup>54</sup>- Lewis Dunn,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delphi Paper 263*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1), p. 43.

<sup>55</sup>- Aga Shahi, "Defense, disarmament, and collective security," *Nonoffensive Defense: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UNIDIR, 1990), p. 184.

<sup>56</sup>- *United Nations document S/RES/984* (1995. 4. 11).

I
II
III
IV
V
VI
VII

기존의 PSA를 보다 발전시킨 결의안 984호는 NPT 회원국이 핵무기가 사용되는 공격이나 공격위협 대상국이 되는 경우에 유엔헌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또한 공격을 받은 국가가 기술적, 과학적, 의료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유엔회원국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핵공격이나 공격위협으로 피해를 본 대상국가가 국제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의사도 표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255호가 단순한 지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결의안 984호는 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고 지원이 늦어져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국제법에 따른 보상의 가능성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안전보장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 2. 소극적 안전보장

1975년의 제1차 NPT 평가회의 이후 적극적 안전보장의 불완전성에 불만을 가진 비핵국들은 그들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금지하는 보다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57</sup>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핵보유국들은 조건과 예외규정을 둔 소극적 안전보장(NSA)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비핵국가를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처음으로 표명한 나라는 미국이다.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이후 미국은 비핵국가를 무마하여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군사적 옵션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안으로서 조건

---

<sup>57</sup> - William Epstei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A United Nations Perspective* (Cambridge, Massachusetts: Gunn & Hain, Publishers, 1984), p. 30.

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다. 조건부 NSA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은 NPT에 가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국제조약에 가입해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핵무기 보유국가와 동맹을 맺었거나 유대가 있는 비핵국가가 미국 영토,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속을 파기하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sup>58</sup>

흥미로운 것은 1978년 미국 국무장관 밴스(Cyrus Vance)의 유엔연설로 정책화되기 시작한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이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사실이다. 1995년 4월 5일 러·영·불 3개국은 유엔총회에서 비핵국에 대한 핵보유국의 안전보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문안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발표한 바 있다.<sup>59</sup>

NPT에서 허용한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중국만이 조건 없는 핵불사용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1964년 이후 중국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또한 비핵국이나 비핵지대 지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무조건적인 핵선제불사용과 비핵국가와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할 것을 다른 핵보유국들에게 제의하고 있다.<sup>60</sup>

부시 행정부가 2001년 12월 31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

<sup>58</sup>- Speech of Secretary of State Cyrus Vance at the 1978 U.N.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U.N. Document A/S-10/AC.1/30*.

<sup>59</sup>- *P5 Statement on Negative Security Assurance* (1995. 4. 5).

<sup>60</sup>-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Nuclear Testing* (October 5, 1993); *S/1995/265*.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에서 북한 등을 핵공격이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소극적 안전보장 입장에 위배되고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NPR의 동기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관련해서 NPR은 세 가지 ‘긴급상황’(contingency)을 상정했다.<sup>61</sup> 긴급상황은 냉전시대 소련에 대해서와 같은 대규모의 핵사용은 불필요하지만 소규모의 핵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첫째, ‘즉각적’(immediate) 상황은 잘 조직된 당면위협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라크의 공격,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 및 대만해협에서의 분쟁 등 세 가지 사례가 해당된다. 둘째, ‘잠재적’(potential) 상황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태를 말하는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새로운 적대집단의 등장이나 하나의 사례이다. 셋째, ‘예견되지 않은’(unexpected) 상황은 기존 핵국의 지도부가 적대세력으로 교체되거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이 적대국이 갑작스럽게 WMD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안보적 도전을 말한다.

NPR은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5개국을 세 가지 긴급 상황에 모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적대세력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공격위협을 하는 경우에 핵무기 사용을 상정할 수 있다는 기본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또한 역대 미 행정부가 모두 특정 국가를 핵사용이 가능한 대상국가로 고려해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상황이긴 해도 부시 행정부의 경우 핵공격이 가능한 대상국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우려와 비판이 야기되긴 했지만 과거 행정부의 NPR도 대상국의 명단을 외부에 밝히

---

<sup>61</sup> -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지 않았을 뿐,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대상국을 명시했었던 것이다.<sup>62</sup> 이 점에서 NPR은 기존의 소극적 안전보장과 상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북한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NPR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3. 미국의 대남 핵우산

북한이 NPT 회원국 자격으로 제공받는 PSA와 조건부 NSA는 비핵국가에게 주어지는 국제규범상 최상의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NPT 체제에 잔류해있는 동안에 또한 그 체제를 떠나서도 PSA와 조건부 NSA를 뛰어 넘는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해왔다. 간단히 말해서, 조건부 안전보장은 핵위협을 지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공격을 받고 나서 PSA를 제공받아봐야 소용이 없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핵사용과 핵사용 위협을 하지 말라는 요구인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만으로 핵위협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핵전쟁 연습훈련이라고 비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동북아 지역 미군의 핵전력 철수, 핵우산을 제공하는 조약의 파기 등이 이뤄져야 핵위협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제네바 기본합의를 협상하던 1990년대에도 북한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핵무기 불사용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예를 들어, 1994년 9월 1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NPT 연장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NPT가 과거의 상황을 담고 있으며 차별적

<sup>62</sup>-Barry Blechman, “New nuclear policy makes for a safer world,” *Los Angeles Times*, March 18, 2002.

I
II
III
IV
V
VI
VII

이고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고, NPT가 새로운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의했다. ①다른 나라의 영토, 공해상 및 우주에 핵무기 배치 금지, ②비핵지대 창설을 보장, ③무조건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핵 불사용·불위협 약속 제공, ④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⑤전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 실현.<sup>63</sup> 1994년 10월 5일 제4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최수훈 북한 외무성 부상은 NPT가 공정한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핵무기 사용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무조건적인 보장, ②핵무기의 선제사용 금지 약속, ③핵무기 사용의 완전한 금지, ④핵무기 생산 금지, ⑤완전한 핵군축을 위한 시간표 제시.<sup>64</sup>

물론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을 넘어선 과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서 밝힌 대로, PSA와 조건부 NSA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용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완·발전되면서 그 정당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안전보장이 기존의 PSA와 조건부 NSA를 넘어 설 수 없는 데에는 핵보유국 북한에 대응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미국의 핵우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법적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미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보유를 포기한 비핵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이다.

먼저, 한·미동맹의 경우 양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

<sup>63</sup>- *FBIS-EAS-94-184* (September 22, 1994).

<sup>64</sup>- *FBIS-EAS-94-196* (October 11, 1994).

회의(SCM) 때마다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 해두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를 보다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보장받아 온 것이다.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즉 NSA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에 따르면, 핵보유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상기 예외조항에 의거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안전장치라면,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에 담겨있는 예외조항은 핵우산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9번째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만큼 비핵국가를 전제로 한 예외조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핵보유국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이를 핵으로 보복·격퇴하는 데 국제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우산은 냉전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세력팽창과 전쟁유발 위험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특정국가에 대한 핵보복 위협은 해당국가의 도발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데 기여해왔다.

예를 들어,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에게 화학·세균무기를 연합군에게 사용할 경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력’(이는 핵무기를 지칭하는 것이었음)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경고는 후세인이 전쟁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아직도 군사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한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핵우산의 효력은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I
II
III
IV
V
VI
VII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결론

## 1. 북핵위기의 전략적 합의

북핵문제가 공론화된 1990년대 초 이후 처음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남북간 합의, 이후에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북·미간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있었으나 북한이 핵보유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결국 이런 노력들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제네바 합의로 대표되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연계정책과 6·15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무시되고 가려졌던 북핵문제가 결국 새로운 위기로 비화되어 우리 앞에 등장했다. 북한이 비밀 핵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당시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정권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면 북핵문제가 현재와 같은 위기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차단했다는 정치적인 업적에 집착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인 비밀 핵개발 징후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이자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한 후 북한의 대내 지도이념으로 정착된 ‘선군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실천수단이다.

동시에 북한 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도와 국제안보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갖는 국제정치적,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핵문제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북한 핵을 둘러싼 문제가 안보위기로 비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인권과 각종 불법행위 등을 포괄하는 ‘북한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4강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북한문제의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현상변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당면한 북핵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남북한의 군사관계 차원에서 볼 때, 핵무기는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주었고, 역으로 남한을 비대칭적이고 불리한 전략적 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남한으로부터의 핵보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핵탄두와 방사능 무기를 이용해서 남한에 대해 핵공격과 핵테러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그런 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핵위기의 전략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물리적인 핵무기 보유상태와 핵무기의 대남 투사능력을 과학·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북핵 능력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나 핵무장 능력을 보유한 북한과 핵무기 개발 옵션을 완전히 포기한 한국 사이에 형성되는 ‘억지전략의 관계’(deterrence strategy relationship)라는 맥락 속에서 북핵위기의 전략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기 이전에 핵의 요소가 빠진 남북한 간의 전통적인 억지관계는 ‘연속억지’(serial deterrence)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속억지는 제한된 규모의 무력사용과 이에 대해서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감내할 수는 있는 규모의 보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즉 주기적으로 제한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규정된다.<sup>65</sup> 연속억

I
II
III
IV
V
VI
VII

지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주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억지가 구현된다. 규모는 제한되지만 보복을 실행하고, 적대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확전을 자제함으로써, 적은 규모의 충돌이 반복되더라도 파국은 막는 상황이다. 연속억지에서는 피해와 고통을 주고받는 것이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이자,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도·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와 같이 오랜 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연속억지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66</sup> 분단 이후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정치·외교적인 선전전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남북관계도 상대적으로 남한이 당한 고통이 크긴 하지만, 제한된 규모의 피해와 고통을 주고받는 연속억지의 관계에 놓여왔다고 할 수 있다.

핵이 없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온 한국의 재래식 억지전략이 북한이 핵을 갖게 된 현 상황에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론도 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이로 인해 야기된 부실한 재래식 전력, 북한의 남침을 적극 지원할 동맹의 부재, 전쟁의 발발은 북한정권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정권의 대남 공격의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67</sup> 이런 견해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을 억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다만 예외가 있다면 북한정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최후수단으로 대남공격을 선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의 핵을 보유한 불량국가는 핵무

<sup>65</sup>- Patrick Morgan, "North Korea and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3, No.1 (2004), p. 11.

<sup>66</sup>- *Ibid.*, p. 12, 각주 5번.

<sup>67</sup>- *Ibid.*, p. 11.

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불량국가의 핵무기 사용 여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상 국가가 누구인가와 북한이 직면한 안보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핵사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남한에 대해서 핵사용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시대에 미·소는 억지개념과 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 지도부는 억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신생 핵국은 억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억지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서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핵전력에 대한 과신과 억지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억지전략의 남용과 미숙한 구사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억지 전략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핵의 선제사용을 부추기는 위협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핵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유사시 핵사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가 다른 핵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핵이 없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전력은 남한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2차 공격력이라고 볼 수 있다. 히로시마급 핵무기 10여 개가 수도권과 주요 산업 단지에 터진다면 남한이 입는 피해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입장에서 핵전력은 남한에 대한 1차 공격력이 될 수도 있다. 북한정권은 핵무기의 파괴력을 굳게 믿고 이를 선제사용해서 남한의 군사적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I
II
III
IV
V
VI
VII

것이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민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핵을 이용한 선제 공격의 동기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속성을 감안할 때,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 정권이 제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 행동을 억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문제는 대북 억지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와 결의라는 점이다. 억지란 대상국가의 이런 의지를 규제하고 억지전략에 따른 위협은 이런 결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소수의 핵무기는 군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북한의 핵전략이 구사될 한반도의 현실은 이런 결론을 내릴 만큼 간단하지 않다.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신생 핵국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기존 핵국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상대 핵국의 대규모 핵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전략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즉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소수의 핵을 보유한 핵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남한과 같은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 간의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는 경우, 북한은 남한의 전쟁수행 의지를 꺾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발발 전에 성공적인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전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우위를 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외중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도 비핵국인 일본에 대해서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남한 군 수뇌부의 목덜미를 잡아 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남한의 군 지휘부는 만에 하나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차원의 우려 수준을 넘어서서, 군의 사기와 전쟁수행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약 전쟁 직전에 혹은 전쟁 기간 중에 단 한 발의 핵폭탄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과 국민들의 전쟁수행 의지가 꺾이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만연하는 공황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국지전을 감행해서 백령도나 수도권 등 핵심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조기 종결시킬 목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하는 경우 남한 내부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억지가 실패한 후 발생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능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 2. 바람직한 북핵폐기 절차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제반 능력을 해체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은 과학기술과 국제정치가 교차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북핵 폐기와 검증이 상당부분 과학·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인 동시에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과정과 합의를 실천하는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폐기의 대상인 북한의 핵능력은 세 개의 분야와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 세 개의 분야란 이미 제조했거나 제조중인 핵무기, HEU를 생산하는

I

II

III

IV

V

VI

VII

농축활동, 그리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활동이 그것이다. 네 개의 요소란 핵무기, 핵무기의 제조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 핵물질 및 전문 인력으로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북핵 폐기와 검증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핵활동 동결 및 정보공개 단계

이 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 (1) 모든 활동의 전면 중단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다. 네 개의 요소와 세 개의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핵무기〉: 핵무기의 배치, 운반, 사용전략 논의 등 핵무기의 사용과 핵 억지력의 행사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단.

〈하부구조〉: ①핵무기: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및 관련 시설과 장비의 건설·구매 등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단, ②농축: 농축에 관련된 모든 연구, 개발, 실험 및 관련 시설과 장비의 건설·구매 중단, ③재처리: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중단, 50MWe, 200MWe 원자로의 건설 중지, 핵연료봉 제조시설 폐쇄, 재처리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건설·구매 중단.

〈물질〉: ①핵무기: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등에 사용되는 물질의 제조·구매 등의 활동 중단, ②농축: 우라늄 광산 개발, 옐로우 케익, 6불화우라늄(UF6) 및 HEU 등에 대한 연구와 생산 활동 중단, ③재처리: 핵연료의 제조, 사용후핵연료의 이전 및 플루토늄의 생산 등을 중단.

〈인력〉: 영변 핵연구단지과 핵장치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및 기타 핵 관련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현장 접근을 차단.

## (2) 모든 정보의 공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재처리·농축 시설과 기술 및 관련 활동과 인적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핵 관련 활동의 중단과 정보의 공개는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사항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핵무기〉: 핵무기의 제조시점과 설계 및 파괴력, 핵무기의 배치 위치와 관리 및 명령체계.

〈하부구조〉: ①핵무기: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및 관련 시설과 장비의 목록과 소재, ②농축: 해외에서 수입한 모든 장비, 기술 및 그 소재와 해외 수입처,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제조한 모든 장비, 기술 및 그 소재, 연구·개발, 시험, 제조 시설과 이들 시설의 작업기록, 농축시설의 설계와 건설 등, ③재처리: 5개 동결시설(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 및 건설 중인 50MWe, 200MWe 원자로)을 포함해서 IAEA에 신고한 16개 시설의 현황과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 이후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제조공장의 운영기록 등.

〈물질〉: ①핵무기: 핵무기의 제조와 연구·개발, 기폭실험, 핵실험 등에 관련된 물질의 목록과 소재, ②농축: 해외에서 수입한 모든 물질의 소재,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제조한 모든 물질 및 그 소재, ③재처리: 보관 중이던 8,000개의 폐연료봉의 재처리 진행상황과 소재, 2002년 12월 이후 추가 생산된 플루토늄의 양, 5MWe 원자로에서 추가로 생산한 폐연료봉의 존재여부와 내역, 새로 제조된

I
II
III
IV
V
VI
VII

핵연료의 양과 소재, 북한이 1992년 5월 IAEA 사찰을 받기 이전에 이뤄졌던 소위 ‘과거 핵활동’ 등.

(인력): 핵무기의 제조와 배치, 운반, 보관 및 사용에 관련된 군인과 민간인, 핵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과학자와 기술자, 핵 관련 시설의 경비책임을 맡은 군인·경찰 등 인적자원.

## 나. 임시사찰 단계

공개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임시사찰을 실시한다. 핵물질에 대한 사찰은 단순한 육안 확인만으로 불가능하며 사찰을 위해 특수기계장비를 제작하거나 과학적 실험을 실시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임시사찰을 완료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한 남아공의 경우 사찰준비에서부터 완료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고발자가 사찰작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개발 현황과 현지 시설의 운용에 정통한 정보제공자의 존재야말로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 못지않은 귀중한 정보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겨날 지도 모르는 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다. 핵능력 해체 단계

핵능력 해체 단계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단계를 말한다. 핵무기의 폐기는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이며, 핵시설 해체에도 첨단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핵능력 해체 이전에 상황파악을 위한 IAEA 사찰을 실시하는 데만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핵시설 해체비용만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sup>68</sup>

한 연구에서는 핵시설 해체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sup>69</sup> 첫째는 각 시설의 운용체계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안전보관’(safe storage) 단계이고, 둘째는 해체가 용이한 부분을 해체하고 시설의 오염도를 줄이면서 시설에 대한 외부차단 규모를 줄여나가는 ‘둘러싸기’(cocooning) 단계이다. 셋째는 모든 시설을 해체하고 시설 부근의 방사능을 완전히 없애는 ‘녹색마당’(greenfield) 단계이다.

### 라. 감시 지속 단계

감시 지속 단계는 이상의 세 단계를 통해 확보된 북한의 비핵화 상태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과 점검 차원의 사찰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단계이다. 북한의 NPT 재가입은 북한당국의 의지와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PT의 정상적인 회원국으로서 받게 되는 IAEA의 정기사찰은 감시 지속 단계가 일정기간 이행된 후어나 가능할 것이다. NPT를 위반한 핵개발 국가로서의 오명을 씻고 정상국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핵개발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어야

<sup>68</sup>- 강정민, “북핵 사찰검증 핵심 쟁점,” 『신동아』 (2006. 1), pp. 234-243.

<sup>69</sup>- Michael May, et al., *Verifying the Agreed Framework* (Livermore: Center for Global Security Research, April 2001), p. 75.

I
II
III
IV
V
VI
VII

하기 때문이다. 핵개발을 포기한 북한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전성훈.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통일정세분석 2007-05)』.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정형곤·나승권·박철형.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제07-17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 5.

Baker, Howard and Lloyd Cutler. *A Report Card on the  
Department of Energy's Nonproliferation Programs with  
Russi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nergy, January  
10, 2001.

Cheon, Seongwhun.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  
Nuclear Policy: A Case of Sou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5.

Dunn, Lewis.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delphi Paper  
263*.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1.

Goodby, James, *et 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Center fo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ptember 2004.

May, Michael *et al.*. *Verifying the Agreed Framework*. Livermore:  
Center for Global Security Research, April 2001.

-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Nuclear Status Report: Nuclear Weapons, Fissile Material, and Export Controls in the Former Soviet Union*. Monterey: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2001.
- Orlov, Vladimir, ed.. *Guidebook: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oscow: Human Rights Publishers, 2006.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January 2004.

## 2. 논문

- 강정민. “북핵 사찰검증 핵심 쟁점.” 『신동아』. 2006. 1.
- 조성렬.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평화통일포럼 제7차 세미나 자료집. 2007. 5. 3.
- Cheon, Seongwhu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political implications and inspection formats.” *Verifying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A Technical Analysi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003.
- Gottemoeller, Ros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beyond Russia.”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5.
- Luongo, Kenneth and William Hoehn III. “Reform and expans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rms Control Today*. June 2003.

- Morgan, Patrick. "North Korea and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3, No.1. 2004.
- Read, Jeffrey. "Reported accomplishments of selected threat reduction and nonproliferation programs." *RANSAC Policy Update*. July 2005.
- Shahi, Aga. "Defense, disarmament, and collective security." *Non-offensive Defense: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UNIDIR, 1990.
- Squassoni, Sharon.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RL32359*. January 27, 2005.
- \_\_\_\_\_. and Andrew Feickert. "Disarming Liby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S21823*. April 22, 2004.
- Stone, Richard. "News focus." *Science*. January 13, 2006.
- Woolf, Amy. "Nonproliferation and threat reduction assistance: U.S. programs in the former Soviet Union." *CRS Report for Congress, RL31957*. April 19, 2005.
- \_\_\_\_\_.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97-1027F*. March 23, 2001.

### 3. 기타자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April 1995.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nual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 2007.* Washington, D.C.: The Department of Defense, 2006.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nual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 2006.* Washington, D.C.: The Department of Defense, December 2004.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Volume I, Domestic Preparedness Program in the Defense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y 1, 1997.

G8 Senior Group. *G8 Global Partnership Annual Report.* June 2005.

*Gleneagles Statement on Non-Proliferation.* June 2005.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of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GOV/2004/12.* February 20, 2004.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llicit Trafficking and Other Unauthorized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ugust 21, 2005.

*Report on the G8 Global Partnership.* St.Petersburg, July 16, 2006.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지	5,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중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중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안보전략	박중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중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KINU 정책연구 시리즈 07-01

이 책은 친환경소재인 일레이션지(표지)와 이라이트지(본문용지)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www.kinu.or.kr](http://www.kinu.or.kr)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 성 훈 (金星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2006)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2001)

 통일연구원

  
9 788984 794023 93340  
ISBN 978-89-8479-402-3